

해방 후 공공성을 둘러싼 위기 담론 속 소거된 부랑자와 공공공간의 정화*

송정현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 목 차 -

I. 머리말

II. 해방 이후 부랑 한센인의 문제

III. 부랑 한센인이 재격리되는 과정

IV. 맺음말: 미군정의 통치전략 속 타자 감시 작동

〈국문초록〉

해방공간은 장기간 식민 통치에 노출된 특수한 환경이었다. 일제 36년간의 침탈과 수탈 속에 방치된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식민 통치 후유증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걸쳐 제 문제로 나타났으며, 식민지 농업 수탈의 유산으로 생겨난 빈민 문제의 확산은 부랑자 출현과 연쇄적으로 작동했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랑자는 더 이상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다. 특히, 부랑자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부랑 한센인이라 할 수 있다.

부랑 한센인 사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강제적이면서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제강점기부터 부랑 한센인 관리 방식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정책도 크게 다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지 않았다. 한센병은 해방공간에서도 혐오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고 정책 당국조차 사회 질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재생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미군정은 사회 내 공포와 혐오를 해결해 앞으로 수립할 통치 체제에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은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던 부랑 한센인을 공공공간에서 처리해줌으로써 통치 목표를 완수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통치 기제로써 포섭과 철저한 배제의 방식인 차별관리가 적용됐다. 국가로부터 배제된 부랑 한센인은 강제적인 격리 방침에 의해서 점차 공공공간에서 소거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센인과 비한센인의 경계는 더욱 확고해졌다. 본 논문은 미군정의 남한 점령통치 목표에 투영된 통치 전략과 그 안에 함의된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 부랑자, 한센인, 비국민, 공공성, 차별관리

I. 머리말

일제 강점이라는 고통의 관문을 지나 맞이한 해방은 한국인들에게 잠시나마 환희와 자유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했다. 이윽고 미군이 진주함과 동시에 해방공간의 새로운 주인으로 교체되자 기쁨의 감동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해방의 감동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이마저도 한국인들 모두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반민족 부류를 제외한 대다수 한국인에게 일제 치하의 억압과 아픔의 경험은 동일하게 강제됐지만, 해방 직후에 맞이한 자유와 기쁨의 의식은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에게는 경계 너머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은 국가 경계 안에서 사회적 배제자 혹은 소외자로 분류됐다.

예부터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생득적 관념을 통해 발전시킨 결과, 군집을 통한 사회 곧 국가 형태로까지 발달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형성된 국가 안에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법과 역할들이 생겨났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및 개인의 안전이라는 명목은 점차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를 구분해내기 시작했다. 국가 위기는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에 결부되어 점차 동일시됐고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 운영 원리로써 공공성이 상정되었다. 국가 운영

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질서가 제 분야에 적용되었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절대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사회적 배제자들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이들은 국민과 구별된 사람으로서 시대에 따른 국가 운영 체제를 거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적이고 적대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대표적으로 부랑자(浮浪者)가 있다.

부랑은 일정한 거주지와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전통사회에서는 유민(流民)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¹⁾ 농업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농민층의 분화와 전세를 비롯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빈농층과 몰락농민층이 양산되면서 유망(流亡) 인구인 유민을 촉발시켰다.²⁾ 전통사회에서의 국가는 이러한 유민을 다시 국가 경계안으로 두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랑자는 더 이상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다.³⁾

1) 부랑자는 부랑아, 부랑인, 부랑 한센병 환자 등 다양한 파생어로 쓰인다. 부랑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부랑아는 부모와 떨어져 떠돌아다니는 아이를, 부랑인 혹은 부랑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배회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부랑아와 부랑인 외에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부랑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음을 밝혔다. 부랑이라는 단어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일정한 거주지도 직업도 없이 떠도는 행위 외에도 도덕적인 비난과 통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됐다. 김재형, 『부랑나환자』 문제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회의 경쟁과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19,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9, 124쪽 참고. 한편으로는 부랑자를 권력층과 상류층 가문의 청년자제들이 직업 없이 도박, 유흥, 사치, 낭비, 밀매 등 일삼아 재산을 탕진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젊은 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사회와 역사』 89, 한국사회사학회, 2011, 48쪽 참고.

본고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빈곤으로 말미암아 거주지를 떠나 정착하지 못한 채 배회하는 이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부랑자 용어를 사용한다. 부랑자 중에서도 부랑 한센병 환자를 칭하는 말로 나환자(癩患者), 나병자(癩病者), 문둥병자, 문둥이, 레프라(レプラ) 환자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에는 차별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를 바로잡아 원문 인용 시를 제외하고는 '부랑 한센인' 혹은 '부랑 한센병 환자'로 사용한다.

2) 조선시대 유민 정책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정책 연구」, 『민족문화연구』 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3)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7, 한국사회학회, 2015. 일제시기 부랑자 출현에 주목해 부랑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 집중하였다. 나아가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부랑자 처리 문제를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기에

근대 사회는 일제가 식민 통치를 명목으로 조선에서의 중소 지주를 비롯한 자작농, 자소작농 등 농업 생산 인구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그로 인해 농촌사회를 일본인 및 조선인 대지주와 그 소작인으로 양분하여, 빈곤을 심화하면서 빈민 인구를 양산하였다.⁴⁾ 이러한 수탈적 농업 정책으로 인해 농민은 결국 농촌에서 유출되어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 토막민(土幕民)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부랑자, 궁민(窮民), 결인 등을 빈민의 범주에 포함하였고 토막민의 경우에는 범주를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로까지 인식했다.⁵⁾ 김경일의 연구는 경성 내 토막민을 사례로 살핀 선구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식민 당국이 도시 현안 중에서도 토지의 무단 점거를 일삼는 토막민을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도시 하층민에 대한 식민 정책에 집중했음을 살폈다.⁶⁾ 이처럼 식민지 농업 수탈에 맞물려 생겨난 빈민 문제의 확산은 부랑자의 출현과 연쇄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부랑 한센인 관리 방식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김재형은 식민지 조선에서 부랑 한센인의 문제에 주목하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낙인과 차별의 방식이 국가의 강제 집행만이 아닌 사회의 협력이 일정 정도 작용했음을 밝혔다.⁷⁾ 김미정은 일제강점기 한센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배경에 근거해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에 작용했는지를 살폈다.⁸⁾

일제강점기 한센병은 혐오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고 식민 당국

맞물려 시행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서 살폈다.

- 4) 일제강점기 빈민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 강만길, 『일제강점기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7.
- 5) 곽건홍,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163-164쪽. 토막민에 관한 연구로는 1940년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발간한 것도 있다.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저, 박현숙 역,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 6)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1986.
- 7) 김재형, 앞의 논문, 2019.
- 8) 김미정,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1930~40년대 소록도 갯생원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2012.

조차 사회 질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재생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 부랑 한센인을 비국민으로 치환하여 정상적인 노동력 운영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여겼다. 또 한편으로는 일제가 사회 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로써 사회로부터 혐오스러운 대상을 처리해주는 방식의 하나로 격리와 배제를 거침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데 기인한다.

해방 사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방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통제 지배력이 소홀해지면서 부랑 한센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센인의 탈시설과 급증에 관한 사례를 다룬 김정일의 연구가 있다.⁹⁾ 한센인 외에도 해방 후 궁핍, 가출, 이산, 실항 등으로 거리를 부유하는 다양한 부류의 부랑자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식민지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호가 아닌 단속의 대상이었다.

박숙자는 부랑자가 비국민의 표상으로 단속대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 감시와 검열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살폈다.¹⁰⁾ 이영환은 해방 이후부터 4·19에 이르기까지 도시빈민의 출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빈민의 확산 원인을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비롯한 귀환 동포와 월남인 등으로 대표되는 전재민의 유입에 의한 급격한 인구증가가 가속화된 요인을 꼽고 있다. 빈민의 기본적인 구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또한 제기하였다.¹¹⁾ 미군정기 한센병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제인 김이 있다.¹²⁾ 미군정의 한센병 관리와 정책에 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센병 관리를 동아시아 내 미국식 민주주의 이식의 성공사례로 활용하기 위

9) 김정일, 「한센인의 격리제도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9.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중심으로 시설화 방침이 부랑자, 장애인, 전염병 환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보편화되었음을 광범위한 사례를 통해 증명해냈다. 나아가 한센병의 등장부터 격리정책의 변화 그리고 한센인의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10) 박숙자, 「해방 후 고통의 재현과 병리성 -반공체제 속 부랑자와 비국민-」,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17.

11) 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12) Jane Kim, "Leprosy and Citizenship in Korea under American Occupation(1945-1948)", *Salhak Yonku: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2010.

한 것이었고 한국 또한 그 대상이었음을 밝혔다.

해방 후 부랑 한센인들은 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떠올랐고 그들을 향한 무한한 공포는 위기 담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질병에 대한 전염 여부와 같은 사실은 이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한센인은 여전히 혐오스러운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미군정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일시에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성을 담보해주고 나아가 지지를 통한 통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부랑자 신세로 전락한 이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었다. 부랑자는 가족구조 안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부랑자는 부랑아, 부랑인, 부랑 한센인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한센인이라 할 수 있다. 한센인 문제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그 성격 또한 강제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지금껏 한센인 사례 연구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해 근대 국가 통제의 보건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¹³⁾ 이마저도 미군정기 한센인 사례에 주목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¹⁴⁾ 한센병 환자에 대한 수용과 격리는 단순히 질병 관리로서가 아닌 거리를 부랑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의 신체 관리이면서 공공공간 정화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이었다. 이는 미군정 통치에서 신체 규제 방식에 의한 명백한 차별관리로서 통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 13) 김정란, 「일제강점기 부산의 「나병」과 그 대응」,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최정기, 「일제하 조선의 나(癩)환자 통제에 대한 일연구: 나환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정근식,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1), 한국보건사회학회, 1997; 정근식,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일제하 나요양원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1, 한국사회사학회, 1997.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부산나병원의 운영 사례를 통해 나환자 관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됐다. 배대호, 「일제 강점기 부산나병원에 대한 연구(I): 개인과 운영체제의 변경 그리고 수용 나환자 변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21, 부산경남사학회, 2021; 배대호, 「일제 강점기 부산나병원에 대한 연구(II) -위치와 부지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 14) 주윤정, 「해방 후 한센인 관련 사회사업 -천주교계 사업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한센인을 근대 국가 형성 이래 대표적 사회적 타자 집단으로 상정하고 교회의 사회사업과의 관계성을 밝히고 있다.

해방공간은 미군정에 의해 새롭게 재건될 자유주의 진영 확산을 위한 무대였다. 해방 국민에게 기쁨의 공간은 마땅히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했지만, 위생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도시 농촌 구분할 거 없이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특히, 부랑 한센인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보다도 큰 것이었다. 미군정으로서 사회 내 공포, 혐오, 더러움 등을 해결해 앞으로 수립할 통치 체제에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염두하고 부랑 한센인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이 미군정에 의해 어떻게 공공공간에서 소거되었는지 밝히겠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방관 속에서 만들어진 사회 위기 담론도 함께 살피겠다. 이는 남한 점령통치 완수라는 목표에 투영된 미군정의 통치 전략에 함의된 역사적 의미를 증명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II. 해방 이후 부랑 한센인 문제

해방공간은 일제 36년간의 침탈과 수탈 속에 방치된 열악한 상황이었다. 식민통치로 인한 후유증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제 문제로 나타났다. 일제의 전쟁 강제 동원으로 인한 경제적 쇠퇴는 해방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물자 부족 현상은 사회 무질서 현상으로 이어져 치안 혼란을 낳았다. 여기에 전재민의 유입까지 더해져 주택을 비롯한 생활시설의 부족 현상은 보건 및 위생 문제를 촉발하였다. 일제로, 해방 직후 병원 운영이 멈춘 상태였고 거리 곳곳은 분노와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거리에서 부패한 시체들을 마주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었다. 수천여 명의 전재민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형편이었다. 상수도 공급은 원활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끊기는 일이 잦았다. 도시 경관은 말할 것도 없이 참담한 수준이었다.¹⁵⁾

15) 97th Military Government Group, Hq&Hq Det, Office of the Provincial Military Governor, Seoul,

서울시 담당 군정장관(James E. Wilson)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첫 임무로 도시 청소를 중요 현안으로 상정하였다. 거리 청소를 비롯해 하수도 수리 및 확장을 통한 전염병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⁶⁾ 당시 이런 상황은 일제강점기 동안 방치된 사회 인프라에 근거한다. 또한 종전과 함께 급속도로 밀려 들어온 인구를 대비할 준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다음의 서울시 전재민 수를 통해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¹⁷⁾ [표]는 1945년 11월 5일자 ‘서울시 전재민 구호 연합회’ 소속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전재민의 숫자를 나타낸다.¹⁸⁾

〈표〉 1945년 11월 1일 기준 전재민 수 (단위: 명)

구분	수
한국인	6,785
일본인	8,061
중국인	498
총 15,344	

위 사례는 남한 전체의 전재민 통계가 아닌 서울시 소재 구호 연합회 산하 단체의 보호 인원이다. 해당 전재민의 숫자는 이후로도 꾸준

Korea,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5(국사편찬위원회, 2001), 108쪽.

16)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City of Seoul, Korea(from 11 September to 30 November 1945),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1(국사편찬위원회, 2001), 340쪽.

17) 전재민(戰災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일제하 징병, 징용, 이민 등으로 국외에 있다가 귀환한 동포들을 총칭한다. 만주,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 귀환 동포를 포함해 38선 이북의 월남민도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전재민은 대개 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대거 귀국하면서 극심한 남한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빈곤과 기아를 맞닥뜨리게 된다. 이영환, 앞의 논문, 1999, 176쪽.

18) History of Military Government, City of Seoul, Korea(from 11 September to 30 November 1945),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1(국사편찬위원회, 2001), 324쪽.

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전재민의 증가 현상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부산에는 해외 인구의 유입을 비롯해 일본으로의 귀환자 등 인구 중첩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맥아더는 남한 점령 담당자인 하지(John R. Hodge)에게 최대한 빨리 부산 점령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¹⁹⁾ 이 같은 조속한 부산 점령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질서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방 직전 부산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5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무려 15만 명 가까이 늘었다. 일본인은 일평균 4천여 명에서 6천여 명이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의 귀환 길에 올랐다. 한국으로의 귀환 인구도 넘쳐나고 있었다.²⁰⁾ 부산으로 입국한 한국인 수를 살펴보면, 1945년 9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평균 6천여 명에서 7천여 명이었고 1주일에 최소 2만 1천여 명에서 최대 5만 6천여 명이었다.²¹⁾ 미군의 점령 과제에서도 난민 통제는 주요한 문제였다. 앞서 맥아더로부터 하지에게 내려진 명령은 이러한 인구 이동의 배경하에 이해할 수 있으며, 부산 지역이 육로와 해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남한 최대의 항구인 부산항이 존재하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일제의 경제적 피탈로 인한 유산과 인구증가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군정의 경제정책 또한 문제해결보다는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남한사회의 빈곤은 한층 심해졌다. 국가가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제공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이들 중에는 앞서 소개한 전재민 구호 단체에 의탁하는 경우가 아니면 길거리를 헤매며 구걸하는 부랑자로 전락했다.

부랑은 일정한 거처 혹은 직업 없이 떠도는 행위를 말하며, 다양한

19) 송정현, 「1945년 미군의 남한 진주과정과 '베이커-포티(Baker Forty)' 작전지역의 설정배경」, 『전북사학』 63, 전북사학회, 2021, 250쪽.

20) 송정현, 위의 논문, 250쪽 재인용.

21) 40th Infantry Division, History of Evacuation and Repatriation through the Port of Pusan, Korea 28 Sept 45-15 Nov 4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지방미군정자료집 1(경인문화사영인, 1993), 41쪽.

부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고아에서부터 걸인, 토막민 그리고 불량 한센인까지도 포함한다. 불량자는 대개 사회적 배제자 혹은 격리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 이들은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명목으로 단속대상이 되기 일쑤였다.²²⁾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나병자, 나환자, 문둥이로 불리던 한센인이 해방과 동시에 거리로 나오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아래 사례는 해방 이후 불량 한센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문둥이 횡행**” 8월 15일 이후 경성, 인천, 개성에서는 **나병 환자가** 상당히 출몰하고 있어 국민 보건상 우려되는바, 관계 당국에서는 이들을 급속 조치하여, 서울 신당정 230번지에 임시로 수용하였다가 교통이 여의해지면 소록도로 보낼 것이라고 한다.²³⁾

위 사례에서 언급한 국민 보건을 우려하게 한다는 부분을 통해서 한센병을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불량하는 한센인 집단은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²⁴⁾ 해방 이전에는 조선총독부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의 소록도에 한센인을 수용해 격리하는 식으로 관리하였다. 소록도는 대표적인 한센인 수용시설이 존재한 곳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혐오를 느끼고 공포를 넘어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 당국은 이런 사람들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용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한센인들을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 바깥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결과였다.²⁵⁾ 이에 1917년부터 「나환자 수용에 관한 건」에 근거해 “노상과 시장 등을 배회하는 병독 전파의 우려가 있는” 불량 한센인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1935년

22) 박숙자, 앞의 논문, 2017, 93쪽.

23) 『大東新聞』, 1946년 04월 02일 기사, “문둥이橫行”.

24) 김재형, 『질병, 낙인』, 돌베개, 2021, 57쪽.

25) 한순미, 「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4,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4, 131쪽.

도에 들어서는 「조선 나(癩)예방령」을 공포하며, 거주지가 있는 한센인 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²⁶⁾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全南서 레푸라群 二百四十名收容, 그들의樂園 小鹿에**” 소록도 갯생원에서는 환자 천여 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으며, 전남에 수용될 환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목포 10명, 광주 15명, 구례 20명, 여수 25명, 순천 50명, 고흥 35명, 보성 50명, 해남 10명, 영암 10명, 나주 15명, 총 240명이다...(중략). 본도에 유랑 배회하는 환자가 격감되어 명량한 전남을 실현시킬 것이나, 아직도 백여 명의 부랑 환자가 거리를 배회한다.²⁷⁾

위 사례에서 명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센인이 마치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는 한센인 처리 방침에서 수용과 격리라는 일관된 조치를 하였다. 문제는 한센병 환자의 격리를 순수하게 질병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만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한센병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질병이 아니라 부랑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해방 후에도 한센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센인을 향한 비한센인의 혐오와 공포는 종전 직후의 급속한 경제 낙후와 사회 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심해졌다. 해방 후에도 여전히 한센인들이 병 치료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다.

유언비어와 관련한 내용은 후술하고 우선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한센병 환자들이 멋대로 풀려나게 되자 해방(解放)이 아니라 해방(害放)이 되었다.”²⁸⁾ 이어 “종전으로 일본이 나병 환자들을 방임해 엄청난 수가 전국에 퍼져 있다. 서울

26) 김재형, 앞의 논문, 2019, 128-129쪽.

27) 『每日申報』, 1937년 10월 28일 기사, 「全南서 레푸라群 二百四十名收容, 그들의樂園 小鹿에」. 레푸라(lepra)는 한센병이다.

28) 『東亞日報』, 1945년 12월 11일 기사, 「서울거리에 라병환자가 범남」.

에서는 상당수의 환자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다. 향린원(香隣園)의 방수원(方洙源) 원장은 경기도 위생과와 협력해 이들을 이번 년 안으로 전부 소록도에 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다.²⁹⁾ 한센인이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자체를 해방(害放)이라고 쓰고 있다.

당시 사람들이 한센인에게 가졌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외적인 면을 들 수 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피부에 우둘투둘한 결절이 생기고 신체 말단이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외모 변형은 시각적 혐오감으로 발현돼 정상적인 외모와 구분되어 낙인과 차별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으로 전염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조선시대에도 한센병을 전염병으로 인식했지만, 조상 혹은 가족 중에서 풍수나 금기를 위반했을 때 걸리는 일종에 미신에 근거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에서 추방해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센병이 눈에 띄지 않는 병균이라는 지식이 조선에 유입되면서 불확실한 과학적 지식과 맞물려 환자를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³⁰⁾

일제강점기에는 오직 격리와 수용의 방침을 취하였다. 식민지라는 특수성에서 생각해 볼 때 강제적 집행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해방과 함께 기존의 일제 통치 권력이 정지되면서 수용시설을 나온 한센인들이 사회로 유입되었다. 재등장한 한센인은 머물 곳을 찾아 공적 공간으로 흘러 들어갔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1〉 “문둥이 주택된 공원, “부민은 당국을 비난” 당국에 부탁하오니 부내 각 공원의 풍기를 단속하라. 지루하게 계속된 장마기로 말미암아 습속에서는 매미 소리가 서늘하고 가을은 멀지 않았다고 부민은 산으로 들로 가을의 산책을 즐겨할 때가 되었는데 요즘 부내 월

29) 『東亞日報』, 1945년 12월 10일 기사, 「放任된 癩患者 小鹿島로 護送」. 향린원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부랑아 수용시설을 말한다.

30) 김재형, 앞의 책, 2021, 51~52쪽.

미도 서공원(현재의 인천 자유공원) 등에는 난데없는 문둥병자, 걸인 등이 운집하여 여기, 저기서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공원의 나무 등을 잘라 집을 짓거나 불을 때 밥을 하는가 하면 분간 없이 각처에다가 대소변까지 눌뽀터러 다시 산책하는 부녀에게 반강제적인 구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첫째 이는 공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기분으로 공원을 더럽혀 가장 신선하고 깨끗하여야 할 공원의 성격을 없애고 있어 부민에게 큰 위협끼리가 되고 있으니 관계 당국은 아직 보지를 못하였는가 보고도 자비심으로 묵과를 하는 것인가 일반은 의심을 마지않는 바이니 하루바빠 그들 문둥환자를 공원에서 없애주기를 바라는 바이다.³¹⁾

〈2〉“인천에 문둥이 홍수” 인천에는 현재 문둥병 환자가 120명이나 있어 매일 작당하여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그중에는 담배 장사까지 있어 부민들은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다.³²⁾

〈3〉“느러가는 문둥이”, “방입하는 당국에 일반은 분개” 기보와 같이 현재 부내에는 약 1백여 명의 문둥이가 선박으로 제주도 방면에서 모여들어 토막 같은데 분산적으로 웅거하여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부민 각 가정에서는 적지 않은 공포와 횡포를 당하고 있다. 즉 자고로 문둥이는 소년들의 육체의 일부를 떼어먹으면 낫는다하여 살육의 참화를 연출하던 과거의 사실도 있어 이점에 대하여 특히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문둥이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엇그제 본지 보도와 같이 일부 문둥이들은 대규모의 작당으로 부민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있어 일반 부민은 부당국의 방입과 속수무책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³³⁾

〈4〉“소녀의 생간 먹어. 나환자의 속출” 문둥이가 소녀의 간을 빼먹은 전율할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향군 포두면 구대리 하백 부락에

31) 『大衆日報』, 1947년 08월 12일 기사, 「문둥이住宅 公園」.

32) 『現代日報』, 1948년 09월 02일 기사, 「仁川에 문둥이 洪水」.

33) 『大衆日報』, 1947년 07월 26일 기사, 「느러가는 문둥이」.

거주하는 송기동(宋基東)은 나병에 걸려 약 3년간 여수애양원(麗水愛養院)에 수용당하였다가 4279년(1946) 4월경 퇴원하자 최근 나병이 재발하자 인육을 먹으면 완치된다는 미신을 고치알고 난 6일 오전 3시경 동리거주 송모의 고용녀 박금자(朴錦子)란 소녀를 보리말로 유인하여 준비하였던 소도(小刀)로 목을 찔러 죽인 다음 흉부를 해부하여 간을 먹었다.³⁴⁾

위 사례처럼 해방 이후 한센인을 비롯해 걸인과 같은 부랑자들이 공원 등지에서 머무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이는 공공공간의 관리 주체가 부재한 사실에 근거한다. 종전 직후에 국가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군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치 공백이 만들어졌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부랑자들이 갈 곳이라고는 역, 광장, 공원 등이었다. 특히 공원은 전통적으로 위락시설의 성격을 가지는데 공격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공원은 근대 도시의 갱생과 정화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도시의 상징성으로 대표된다. (1)을 통해서 공공공간인 공원에서 부랑자가 장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센인을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문둥병자’, ‘문둥환자’, ‘문둥이’ 등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칭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여전히 비한센인에게 한센인은 혐오스럽고 두려운 대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당시 걸인과 한센인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군정으로는 군정 수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으며, 해방 직후 산재해 있는 문제 중에서도 공공공간을 점거하고 있던 부랑자들의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였다.

(3)의 사례에서는 한센인의 부랑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간을 먹으면 완치된다는 설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46년 6월 16일자 미군정 보고서(G-2 주간보

34) 『自由新聞』, 1950년 06월 14일 기사, 「소녀의 생간 먹어! 癩환자의 만행 속출」.

고)에서도 확인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인근에서 9살 소년의 간을 먹은 혐의로 경찰이 한센병 환자를 체포했다는 보고가 있다. 사건의 진위는 한센병 환자가 간을 먹은 것이 아닌 소년이 칼에 찔려 사망한 과실치사와 관련된 것이었다.³⁵⁾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센병 환자가 간을 먹었다는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후로도 미군정기 3년 내내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줄지 않은 채 증폭되고 있었다.³⁶⁾ 해당 사건들을 통해서 한센병이 갖는 사회 인식의 민낯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정책 당국인 미군정을 향해 한결같이 한센인 문제에 대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사람들 즉, 국민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은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일반적인 부류를 뜻한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부류와의 상호관계 혹은 역학관계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가의 존립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적절히 부응해냄으로써 우호적 국민을 양산해 나가는 통치 방식에 근거한다. 국가의 통치 권력은 사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류인 국민을 창출해 내지만 그렇지 못한 부류에 있어서는 경계를 지어 걸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미군정의 남한 점령 목표는 장차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수립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선 미 점령기 동안 최대한 자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양산하고 포섭해 나가야만 한다. 미군정으로서의 국민의 안전에 위협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호적인 부류를 포섭할 수 있다. 예부터 국민과 대비되는 부류들은 사회 통념상 꺼려지는 대상으로서 수치, 비난, 혐오의 성격을 동반한다. 해방 당시에는 이들을 지칭하는 부류에 걸인, 녀마주이, 고아, 한센인 등 다양한 계층이 속해 있었다. 모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행위를 하거나 가족구조 안에서 이탈한 자들로 볼 수 있다.

해방 3년은 수많은 사람이 실직, 이산, 탈향 등으로 실존적 위기를

35) Jane Kim, 앞의 글, 2010, 264쪽.

36) 『大公日報』, 1948년 07월 24일 기사, 「「문둥이」의 蠻行露綻」; 『平和日報』, 1948년 09월 10일 기사, 「문둥이가 幼兒誘拐」; 『自由新聞』, 1948년 11월 02일 기사, 「사람 간 먹으려던 문둥이 사형 연도」.

겪은 장소성이 상실된 시대였다. 해방공간은 어느 것 하나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공간의 정형이라 할 수 있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유산을 비롯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그로 인한 경제적 궁핍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위기 담론이 형성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공공공간은 관리 부재로 인해서 언제라도 부랑자를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곳으로 인식됐다.

Ⅲ. 부랑 한센인이 재격리되는 과정

해방 이후 전쟁과 가난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 거리를 부유하는 현상은 일상이 되었다. 이들은 전재민 수용소에 의탁하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머물 곳을 찾아 공원이나 역과 같은 공공공간으로 유입됐다. 일반 국민들은 공공공간에서 마주치는 부랑자들을 혐오스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정책 당국을 향한 요구로 대응했다. 미군정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사회적 위험 요소인 부랑자를 공공공간으로부터 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단행하였다.

미군정이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오로지 단속과 수용이었다. 이들의 위기는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국가 관리 정책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만 했다. 예컨대, 격리와 수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증명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본 장에서는 부랑자 중에서도 부랑 한센인 사례를 중심으로 미군정의 처리 과정을 통해 이들이 재격리되는 경위를 살펴본다.

광복은 모든 체제의 해방을 뜻하는 동시에 인구 이동 또한 자유로워진 것을 의미한다.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결과는 공공공간의 관리와 위생 문제로 이어졌다. 질병과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지방 도시들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는 업무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인들이 종전 직후 취한 조치였다. 해당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을 풀어준 일이었다.³⁷⁾

예부터 한센병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질병으로 인식되었고 강

력한 전염병으로써 사회에 우려를 낳았다. 미군정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구호, 위생, 청결과 관련된 민정 관리의 핵심 사안으로 보았다. 이에 사회 안정화를 위한 국민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별 군정마다 보건후생부를 신설하였다. 보건 업무에 관한 최초 지령은 1945년 10월 2일자 맥아더 지령에 의해서였다. 살펴보면, ‘첫째, 점령지 주민의 전염병과 사회불안 예방’, ‘둘째, 점령군 임무에 방해가 될 만한 질병의 예방 및 보건관리 체제 확립’, ‘셋째, 점령지 주민의 건강과 복지의 수호를 위해 공중보건과 후생 활동을 정비’, ‘넷째, 점령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귀환인구 관련 건강, 위생, 검역 기준 확립’ 등이 있다.³⁸⁾

첫 번째 지침의 수립은 점령지 내 전염병 예방과 점령지 주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단 점령지 주민에게만 관계된 사안은 아니었다. 점령지 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곧 점령군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만약에라도 전염병이 미군에게 전파된다면 수송을 비롯한 병참, 보급 등 군정 통치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침은 점령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군정에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점령지에서 주민의 협력과 협조를 얻어내는 일은 중요한 사안이었다.

보건후생부의 신설은 해방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해방 직후의 남한은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이 각 도처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질병은 만연해 있지만 수질 정화를 위한 염소나 위생 시설은 열악했다.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에서 백신 생산과 개발에 필요한 건설과 기관 징발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³⁹⁾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은 점령지 주민들의 선의 혹은 협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점령지 주민에게 안전을 보장해줌으로

37) 미군정기 자료 주한미군사, 주한미군사 3(Chapter III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Kyongsang-Namdo), 국사편찬위원회(<http://db.history.go.kr/>) 제공. 2022년 11월 15일 검색.

38)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서울대학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37~38쪽.

39) GHQ, SCAP, Summation No. 1: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for the months of September-October 1945, 22쪽.

써 우호적인 사람들을 포섭해 나가는 통치 전략에 근거한다.

오래전부터 질병은 사회 질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재생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간주하였다. 전염병과 같이 노동력을 대규모로 앗아가는 질병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국가는 사회 안전을 명목으로 한 질병 관리를 통해 개인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곧 국가의 국민관리로써 새로운 성격의 권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⁰⁾

주지하듯이 한센병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데는 일제의 지배적 통제력이 정지되면서 생겨난 결과였다. 일제강점기 동안의 한센인들은 대부분 조선총독부의 강제 집행에 의해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한센인들이 소록도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미군으로서의 진주 이후에 마주한 사회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 질서를 비롯해 공중보건의 붕괴까지도 감당해야했다.

1945년 11월 19일에 작성된 전라북도 주간 군사점령 활동 보고서에는 한센병 환자 처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보고서를 통해서 한센병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사를 통한 환자 등록 방식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군정은 한센병 환자를 소록도에 있는 국립 나병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의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한센병 환자는 서울시 당국에 보고를 거쳐 병원으로 보낼 예정이다.’라고 하였다.⁴¹⁾ 당시 한센병 환자의 출현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한센병 환자 수용처인 소록도의 상황도 여의치는 않았다. 1946년 2월 23일의 미군정 보고에 의하면, 소록도에는 5천여 명의 한센병 환자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에 따른 관리 인력은 의사 5명 그리고

40)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질병, 권력, 인간」,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학사, 1997, 171~172쪽.

41) "28th Military Government Headquarters and Headquarters Company(Weekly Military Occupational Activities Report(Area reported on Cholla Pukto Province))",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47: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1, 국사편찬위원회, 2001, 82쪽.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각 20명과 사무직원이 근무한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이들로는 5천여 명의 환자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서울 당국에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요청 상황이 기술돼 있다. 심지어 소록도의 지리적 위치상 육상과 해상 운송의 부족 현상으로 보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리고 있다.⁴²⁾ 이를 통해 미군정이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제반 준비보다는 격리 방침에만 우위를 두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군정은 남한 진주 이래로 한센인들을 조속히 격리시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이는 1946년 3월 3일자 『서울신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신문에 한센병 환자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공중보건 소속 최영태(공중보건 예방 약품 담당)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인터뷰의 주된 요지는 하루속히 부랑 한센인을 격리한 후에 이송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다시 소록도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과 관련한 것이었다.⁴³⁾ 한센인의 처리 방식은 과거 식민 기구와 동일하게 격리하고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⁴⁴⁾ 아래는 이와 관련한 것이다.

〈1〉 “나환자 소록도로”⁴⁵⁾

〈2〉 “인천의 나환자 소록도에 송환” 해방 후 일인들이 문둥병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던 소록도의 라병환자 수용소를 파괴하고 달아나버린 까닭에 이들 환자는 인천에 다수 오고 있어서 시민의 보건상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인천시 위생과에서는 경찰서와 미군정 당국 등과 협력 조사한 결과 지난 7일 하오 4시 그들의 집합처에서 이용문 외 〇6명의 라병환자를 발견하여 당일로 소록도로 송환하였다고 한다.⁴⁶⁾

42) “Headquarters 61st Military Government Company Changhung, korea(Military Government History)”,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47: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4, 국사편찬위원회, 2001, 9쪽.

43) Jane Kim, 앞의 글, 2010, 265~266쪽.

44) 『國民新聞』, 1948년 09월 22일 기사, 「仁川の 문둥이들 土幕에 收容」; 『婦人新報』, 1947년 10월 04일자 기사, 「문둥이들은 처치해주오」.

45) 『大邱時報』, 1947년 02월 14일 기사, 「癩患者小鹿島로」.

〈3〉 “**나환자 소록도에**” 해방 후 갑자기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나병 환자 20여명을 5월 28일을 기하여 소록도로 보내었다. 그런데 아직도 군내 각 면으로 나병환자 50여명이 돌아다니므로 이를 조속히 요양원으로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하여달라고 당국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⁴⁷⁾

미군정이 한센인 처리에 있어서 거침없이 격리와 수용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을 비국민으로 분류하고 처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미군정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통해 우호적인 국민들을 포섭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통치 전략을 통해서 점령지에서의 선한 점령군으로서의 입지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는 미군정이 단기간 내 남한 점령 완수라는 통치 목표에 근거한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는 특정 사회에서 성원권을 갖지만, 다수자들에 의해서 차별받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서발턴(Subaltern)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성원권마저도 부정당한 부류가 존재한다. 이들을 사회적 타자라 부를 수 있는데 요컨대, 특정 사회 혹은 특정 시기에서 국가권력이나 성원권을 가진 사회 권력에 의해 안전을 명분으로 생명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⁴⁸⁾ 그런 점에서 한센인은 미군정이라는 특정 사회에서 사회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신체를 관리당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부랑은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특정한 질병을 넘어 광의적 범위에서 신체를 지배하는 표지였다.⁴⁹⁾ 근대 이전에도 전염병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근대 국가에서는 더욱 철저히 관리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46) 『自由新聞』, 1946년 10월 30일 기사, 「인천의 나환자 小鹿島에 송환」.

47) 『自由新聞』, 1946년 06월 17일 기사, 「지방소식」 나환자 小鹿島에」.

48)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100, 비판사회학회, 2013, 184-185쪽.

49) 한순미, 앞의 논문, 2014, 131쪽.

개입하는 일이 과거보다 더 일상화되었고 그 성격마저도 폭력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폭력은 근대의학과 근대과학이라는 목표에 가려졌다. 그러는 사이 점점 국가폭력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미화되는 일이 빈번해졌다.⁵⁰⁾

전염병은 과거에도 국가의 위기를 종식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관리되었다. 국가의 통치 구조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운영 원리는 그 역사가 오래됐다. 국가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염병 관리에서만큼은 강제성을 동원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전염병 관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된 방식이 바로 배제와 격리였다. 물론 주된 희생자가 한센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센인은 사회적 기능이 강제로 절단된 이들로 볼 수 있다. 격리는 의학적 행세를 하고 있으나,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강제로 거세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다.

물론 한센병을 전염병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해방 당시 한센병을 전염병으로만 인식한 상황에 근거해 관리 방식에서 강제성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핀 것이다. 한센병은 일제강점기부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반드시 격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돼 왔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관리 주체로 바뀌어도 사회적 문제임은 달라지지 않았다. 미군정은 남한에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성공적 관리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의 정착과 자국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에서 가장 먼저 일제강점기부터 한센병 전문가로 활동했던 선교사(Robert Manton Wilson, 우월순)를 고용했던 이유이다. 로버트는 과거 경험을 살려 한센병 통제에 대한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⁵¹⁾

보건후생은 종전 직후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본의는 조금 달랐다. 보건후생은 탈식민주의를 선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적인 상징성을 지닌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남한을 사례로 한 성공적인 탈식민지 선전과 자유주의 국가

50) 황상익, 「전염병과 국가 관리의 통치술」, 『실천문학』 96, 실천문학사, 2009, 353쪽.

51) Jane Kim, 앞의 글, 2010, 267쪽.

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 탈식민지를 기치로 한 미군정의 통치 방식에서 한센인에 대한 식민지 관리 방식과의 일관성이 모순적이다. 미국이 미군정기 동안에 주창해 마지않던 자유주의 아래에서 개인 신체에 가해지는 강제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정 하 한센인 격리 수용소가 증가하는 것만을 봐도 알 수 있다. 1946년 11월을 기준으로 소록도, 여수, 대구, 부산 등 총 4개의 나병 환자 수용소가 존재했다. 수용소 내 환자의 수는 소록도가 5,580명, 여수 850명, 부산 5~600여 명이였다.⁵²⁾ 수용소는 이후로도 계속 증가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사례이다.

“문둥이들의 낙원” 조선 안에 있는 라병을 근멸하기 위하여 보건후생부에서는 금번 경북 영천과 충북 청주 두 군데에 라병환자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신설하였다는데 이로써 남조선 내의 라병환자수용소는 7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용소에서 취급한 환자 수는 약 8천명에 달한다하여 금년도에는 이번 신설된 수용소까지 합하여 1만 명의 환자를 수용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⁵³⁾

부랑 한센인을 격리하기 위해 발동된 격리 방침은 비한센인과의 경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당시 일차적인 격리 대상이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부랑자는 표면적인 현상만 짚어내는 용어일 뿐이다. 이 시기 부랑에는 종전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고아부터 이북에서 월남한 월남인, 직업을 잃은 실직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무직자,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촌민 등으로 대표된다. 부랑은 일차적으로 전후 분단 속에서 빚어진 사회 변화의 결과였다. 이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궁핍한 삶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류에 가까웠다.⁵⁴⁾

52) 『農民週報』, 1946년 11월 09일 기사, 「호열자로 만여명 사망」.

53) 『中央新聞』, 1948년 02월 12일 기사, 「문둥이들의樂園」.

54) 박숙자, 앞의 논문, 2017, 95쪽.

한센인과 같은 부랑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국가가 깊어져야 할 보호의 책무는 내려놓은 채, 오로지 점령 통치 완수를 위한 점령지 주민의 지지를 얻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유주의를 기치로 한 미국의 통치 방식은 일제의 그것과는 달랐어야 했다. 더구나 남한은 미국의 영구적인 통치 대상 국가가 아니었다. 미국은 남한에 새롭게 수립될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길잡이 역할에 불과하다. 그러니 미국이, 미군정이 남한에서 보건후생부 신설을 통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업무는 한센인과 같은 전염성 환자로 대표되는 이들의 신체 자율화와 치료 지원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비한센인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했다. 아래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 **“나환자 배회가 점가, 음식점자 양심을 편달”** 자유독립과 해방의 희열이 소록도에도 휘날리고 있는가 최근 시내에 범람하고 있는 문둥이(나환자)는 거리거리를 추고 다니면서 무서운 병을 전파하고 있다. 우후죽순같이 족생(簇生) 하는 시내 일부 모리배의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에게 드리는 킹○에 술을 쳐서 **나환자**에도 주고 손님들에게 드리는 밥그릇에 담아 밥을 판다는 말이 들린다…(중략).⁵⁵⁾

〈2〉 **“나환자가 양돈, 목포 부민의 두통”** 목포에는 문둥병자가 범람하여 부민은 누구나 다 골치를 앓고 있는 현상인데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수가 백 명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은 거리에서 담배꽂초를 주서다가 사제연초공장을 수개소에 벌리고 있다하며 교외에서는 도야지(돼지)까지 처가지고 시장으로 내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로 인해 문둥병에 걸린 도야지조차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부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어 부민의 원성이 자못 높아가고 있다.⁵⁶⁾

55) 『大邱時報』, 1945년 10월 29일 기사, 「癩患者徘徊가 漸加, 飲食業者良心을 鞭撻」.

56) 『漢城日報』, 1948년 09월 24일 기사, 「나환자가 양돈, 목포부민의 두통」.

위 <1>, <2>는 각각 1945년과 1948년도의 한센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부랑 한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국가 권력 즉, 미군정이 일제강점기의 한센인 격리 수용 정책을 고민 없이 받아들인 결과에 기인한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부랑 한센인의 격리 방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사람들의 정서를 통치 전략에 활용하였다. 사람들의 오해로 빚어진 유언비어는 방임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부랑자=한센인’이라는 낙인은 한층 강화됐다.

IV. 맺음말: 미군정의 통치 전략 속 타자 감시 작동

국가 운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와 개인의 안전은 필수 사안이다. 국가 위기는 개인의 안전과 이익에 결부되어 동일시되었고 국가 유지를 위한 공공성은 기본 운영 원리로 발전할 수 있었다. 국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를 구분해내는 일은 개인의 안전과 이익 보호에 결부돼 나타났다. 국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절대적이지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점차 국가 범주 안에서 경계 밖의 사람들이 통치를 위협하는 적대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국가는 그들을 사회에서 분리하고 격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부랑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통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부랑은 정해진 거주지가 없거나, 직업 없이 거리를 떠도는 행위를 뜻하는데 전통사회에서는 유민에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국가가 유민을 다시 경계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근대 사회에 들어서는 부랑자가 더이상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다. 특히, 부랑 한센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수용하는 낙인과 차별의 방식을 사용했다. 해방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방 이후 부랑자는 궁핍, 가출, 이산, 실항 등으로 발생한 부류였다. 부랑 한센인의 경우 조선총독부의 통제 지배력이 소홀해지면서 사

회에 재등장하였다. 하지만 부랑 한센인은 사회에서 골칫거리로 떠올랐고 이들을 향한 주민들의 두려움은 공포로까지 번져서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미군정은 부랑 한센인 문제를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일시에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성을 담보하는 한편 지지를 통한 통치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미군정은 부랑자를 만들어진 위기 담론 속에서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군정 통치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하였다. 그래서 방임의 입장에서 통치에 유리한 기제로써 낙인, 격리, 배제의 방식을 거침없이 이용하였다. 부랑이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생활양식의 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특정한 질병을 넘어 광의적 범위에서 신체를 지배하는 표지로까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부랑 한센인의 문제는 질병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혐오를 넘어 해방 공간에서의 공공공간 정비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수용시설을 나온 한센인은 머물 곳을 찾아 공적 공간으로 흘러 들어갔다. 해방 이후 걸인, 한센인과 같은 부랑자들이 역이나 공원 등지에서 머무는 경우는 일상 풍경이었다. 이는 종전 직후에 국가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군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정치 공백이 만들어진 상황에 기인한다. 관리 부재로 인한 공공공간은 일시적인 정지 상태에 놓였다. 특히, 공원은 과거부터 위락시설로서 공간적 의미가 컸다. 근대 사회의 도시 갱생과 정화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공원이 언급되는 이유도 맥락을 같이한다.

부랑자의 공공공간 유입과 처리 과정에서 정책 당국을 향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처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단 공공공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배회하는 부랑 인구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책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하였다. 통치는 통치 대상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미군정은 부랑 한센인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고민 없이 일제강점기 방식을 이용하였고 부랑 한센인은 사회에서 소거되어 갔다. 이후로도 해방공간에서의 부랑자를 향한 타자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비한센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를 향해서 감시자로서 존재했다.

해방공간에서 개인은 미군정에 의해서 통치 대상인 국민과 정화 대

상 즉, 비국민으로 분류됐다. 부랑자는 해방되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로 가난과 거주지를 상실한 실존적 위기를 겪은 이들에 불과했다. 전쟁과 가난의 현상은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미군정의 관리 방식은 오로지 단속과 수용뿐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위기조차 사회적으로 공감할 얻지 못하고 격리와 수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했다. 격리와 수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에 의한 개인의 신체 관리는 더 일상화되었고 그 성격은 폭력적이었다. 이러한 폭력은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가려졌다. 그러는 사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폭력은 정당성을 가지게 되면서 미화되었다. 미군정은 대민관리 목적으로 국민의 대척점에 부랑자들을 위치시켰다. 국가는 국민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과 보호를 통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반대 부류는 국민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배제의 대상에 두었다.

| 참고문헌 |

1. 원서류

GHQ, SCAP, Summation No. 1: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for the months of September-October 194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지방미군정자료집 1(경인문화사영인, 1993).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47: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1, 국사편찬위원회, 2001.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47: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4, 국사편찬위원회, 2001.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現代史資料集成 51: 美軍政期 軍政團 軍政中隊 文書』 5, 국사편찬위원회, 2001.

2. 신문류

『國民新聞』, 『農民週報』, 『大邱時報』, 『大公日報』, 『大東新聞』, 『大衆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自由新聞』, 『中央新聞』, 『漢城日報』, 『現代日報』

3. 저서·논문류(가나다순)

<저서류>

강만길, 『일제강점기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7.

경성제국대학 위생조사부 저, 박현숙 역, 『토막민의 생활과 위생』, 민속원, 2010.

김재형, 『질병, 낙인』, 돌베개, 2021.

한상철, 『한반도 이념전쟁 연구』, 선인, 2018.

<논문류>

곽건홍, 「일제하의 빈민: 토막민·화전민」,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김경일, 「일제하 도시 빈민층의 형성 -경성부의 이른바 토막민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3, 한국사회사학회, 1986.

김경일, 「한센인의 격리제도와 낙인·차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9.

- 김미정,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1930~40년대 소록도 갱생원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역사문화학회, 2012.
- 김재형, 「“부랑나환자” 문제를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조선사회의 경쟁과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19,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9.
- 김정란, 「일제강점기 부산의 「나병」과 그 대응」,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배대호, 「일제 강점기 부산나병원에 대한 연구(Ⅰ): 개원과 운영주체의 변경 그리고 수용 나환자 변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제』 121, 부산경남사학회, 2021.
- 배대호, 「일제 강점기 부산나병원에 대한 연구(Ⅱ) - 위치와 부지를 중심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2.
- 박숙자, 「해방 후 고통의 재현과 병리성 -반공체제 속 부랑자와 비국민-」,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17.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정책 연구」, 『민족문화연구』 3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송정현, 「1945년 미군의 남한 진주과정과 ‘베이커-포티(Baker Forty)’ 작전지역의 설정배경」, 『전북사학』 63, 전북사학회, 2021.
- 신좌섭, 「군정기의 보건의료정책」, 서울대학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7, 한국사학회, 2015.
-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사회와 역사』 89, 한국사회사학회, 2011.
- 이영환, 「해방 후 도시빈민과 4·19」,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 정근식, 「식민지적 근대와 신체의 정치 -일제하 나요양원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1, 한국사회사학회, 1997.
- 정근식,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100, 비판사회학회, 2013. 정근식, 「한국에서의 근대적 나구료의 형성」, 『보건과 사회과학』 1(1), 한국보건사회학회, 1997.
-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질병, 권력, 인간」,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학과학사, 1997.
- 주윤정, 「해방 후 한센인 관련 사회사업 -천주교계 사업을 중심으로」, 『교

- 회사연구』 2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최정기, 「일제하 조선의 나(癩)환자 통제에 대한 일연구: 나환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전남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한순미, 「한센인의 삶과 역사, 그 증언 (불)가능성」, 『민주주의와 인권』 14,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14.
- 황상익, 「전염병과 국가 관리의 통치술」, 『실천문학』 96, 실천문학사, 2009.
- Jane Kim, “Leprosy and Citizenship in Korea under American Occupation (1945-1948)”, *Sahak Yonku: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2010.

Elimination of vagabond and purification of public space in the crisis discourse surrounding publicity after liberation

Song, Jeong-Hyun

| Jeonju University

The liberation space was a special environment exposed to colonial rule for a long time. It was a truly poor situation that had been left unattended for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aftermath of colonial rule appeared as a comprehensive problematic situation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nd the spread of poverty caused by the legacy of colonial agricultural exploitation had negative interaction in tandem with the emergence of the vagabond. With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 vagabond has been recognized as a hazardous risk that must be isolated from society, rather than as a subject to state protection. In particular, among the vagabonds, the biggest victim was Hansen's disease patient.

The Vagabond Hansen's disease patient issue was an incident in which the state power directly intervened in an individual's body, of which nature itself was also coercive and violent.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Vagabond Hansen's disease patients were consistently treated with thorough exclusion and isolation from society. After liberation, the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not substantially different. Hansen's disease was still recognized only as an abhorrent infectious disease, and even the

policy authorities regarded it as a serious threat to the usual maintenance and reproduction of social order.

According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made it a priority to secure the foundation of public support for the governing system to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by resolving fear, hatred, and dirt in societ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ttempted to approach the goal of governance by resummoning non-citize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reating vagabond, which was perceived as a threat, in public space. In the process, as a governing mechanism to gain trust from the people, discriminatory management, which was a thorough exclusion of non-citizens and acquisition, was maintained. Patients with Hansen's disease, who were stigmatized as non-citizens, were gradually eliminated from public spaces, and the boundary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became more solid as coercion was added to the quarantine policy imposed on non-citizens.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historical meaning implied in the US military government's ruling strategy reflected in the goal of completing the occupation and rule of South Korea.

Key words: Vagabond, Hansen's disease patient, Non-citizen, Publicity, Discriminatory management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15일 투고되고, 2022년 12월 04일 심사 완료되어 2022년 12월 06일 게재 확정됨.